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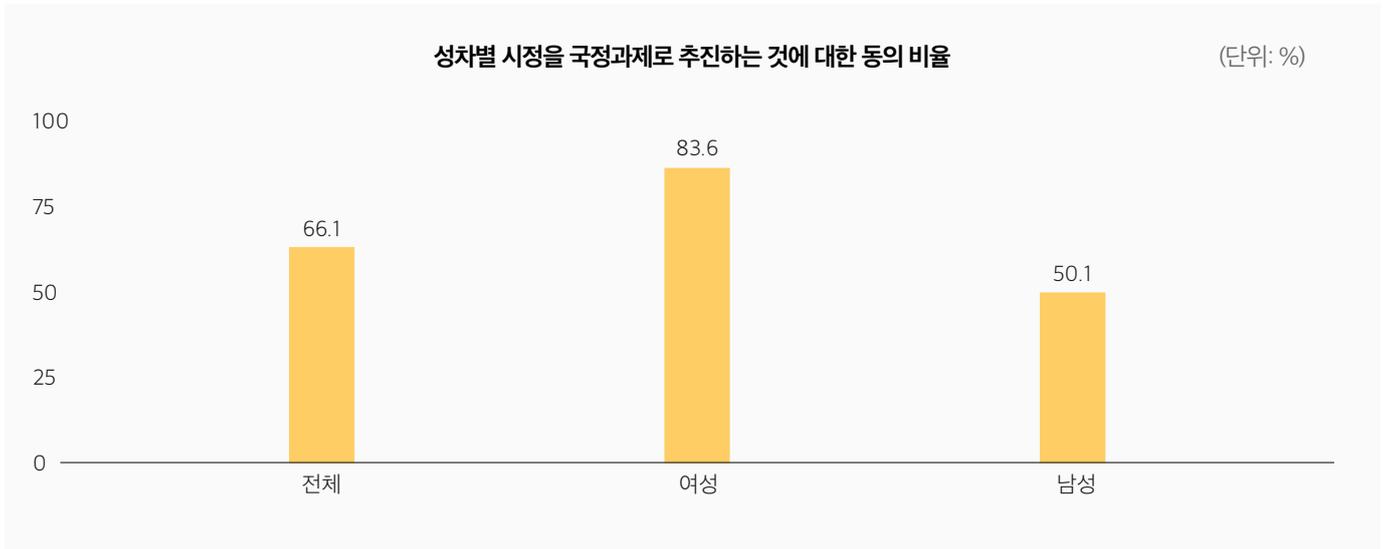
20대 청년의 성평등 인식 격차와 정책 과제

이택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이성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연구원)

-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이른바 '젠더갈등'이라 불리는 청년 남녀의 성평등 인식 격차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정치권에서 확장되면서 커다란 사회 이슈로 등장함. 청년 남성의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정부의 성평등 정책 때문이라는 논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완전히 갈라진 집단처럼 논의됨. 따라서 이러한 대립구도는 정말로 실재하는지, 청년 남성집단과 청년 여성 집단 내부는 정말로 성평등 정책 찬반 입장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5~6월에 실시한 청년 성평등 정치·사회인식 조사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성별뿐 아니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정치성향 등 다양한 속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성평등 정책의 함의를 짚어봄
- 본 자료의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모집단: 전국 만 19세~29세 남녀
 - 표본수: 1,504명(여성 715명, 남성 789명)
 - 표본추출: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4월말) 자료에 근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할당표집
 -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 조사방법: CAWI(컴퓨터 이용한 웹조사)
 - 조사기간: 2021년 5월 28일(금) ~ 6월 1일(화)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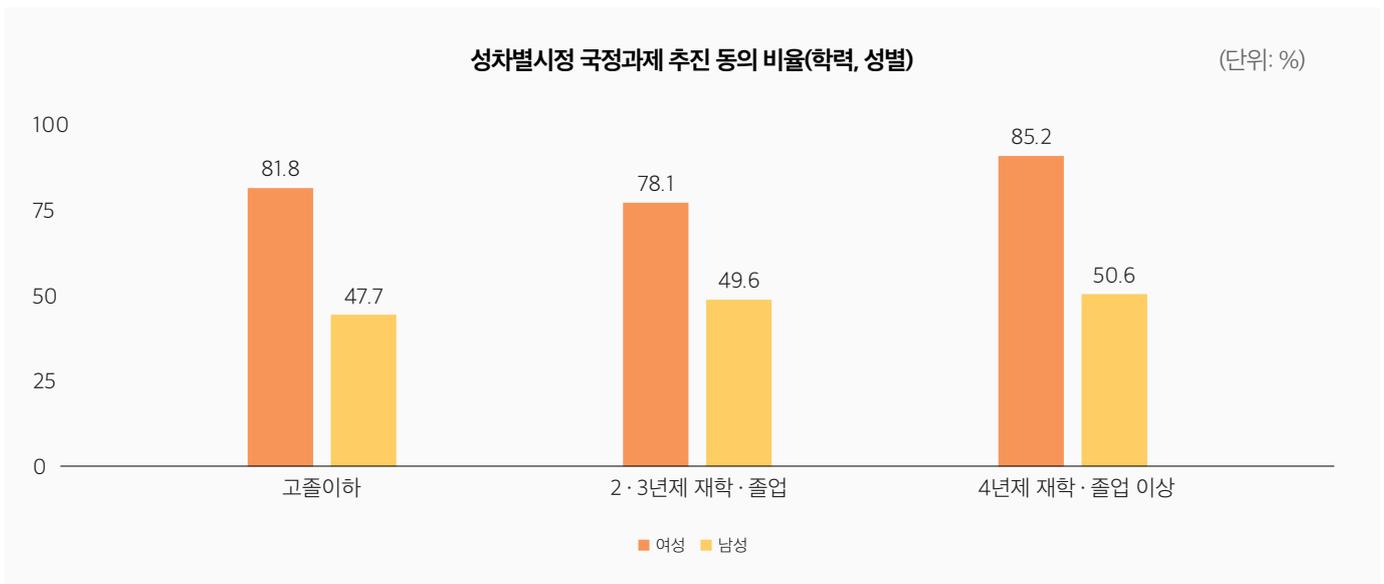
성차별 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태도

- 성차별 시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20대 청년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66.1%). 그러나 남성 중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50.1%로 여성(83.6%)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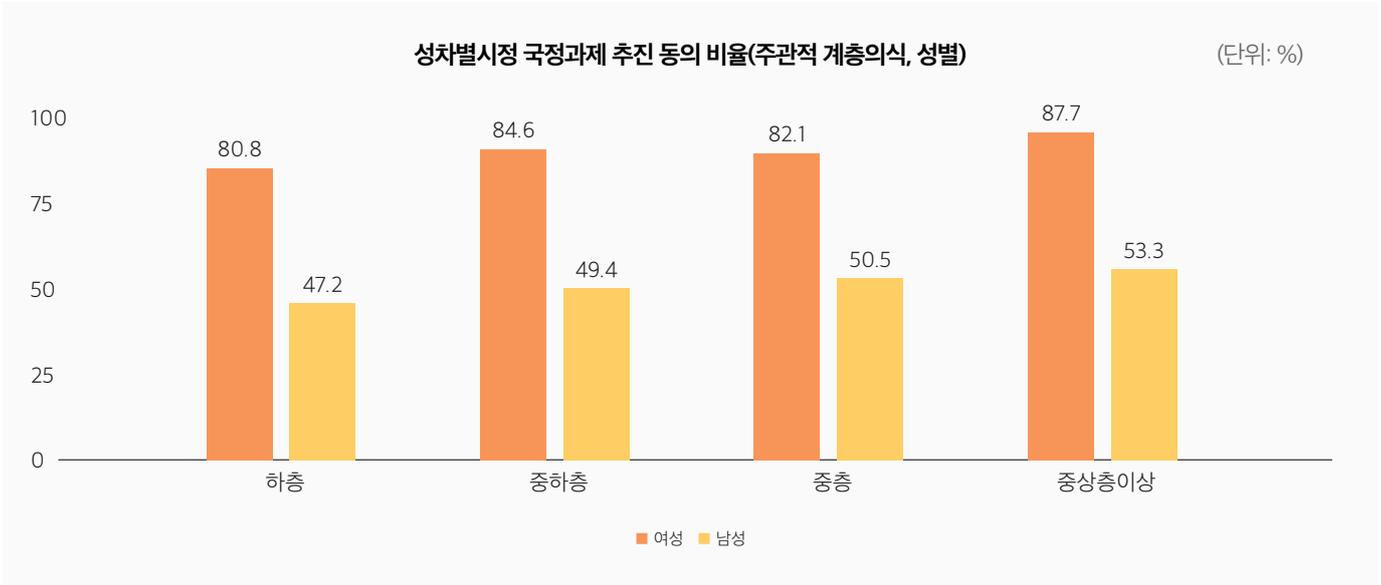


주: “어느정도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합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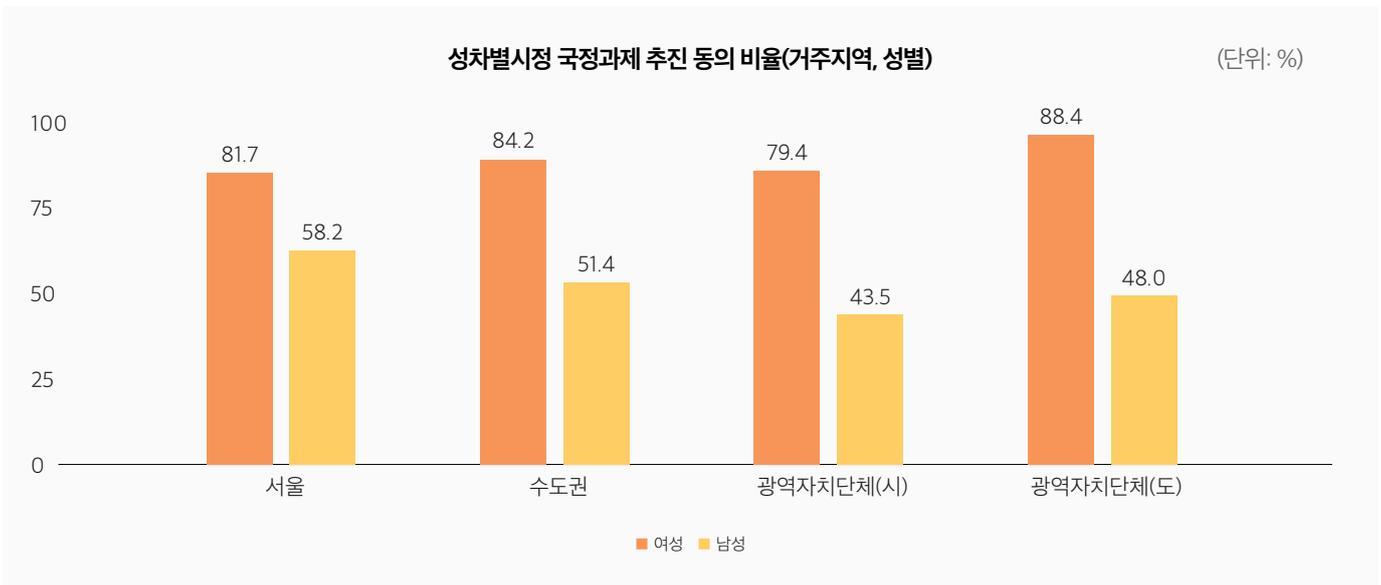
- 이러한 성별 격차는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거주지역, 정치성향, 연령의 차이에 상관없이 유지되었음



- 고졸 이하 그룹 중에서 여성은 81.8%가 남성은 47.7%가 성차별 시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 그룹에서도 여성의 85.2%, 남성의 50.6%가 동의의 태도를 보였음. 저학력 남성 그룹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여성의 높은 동의율은 변함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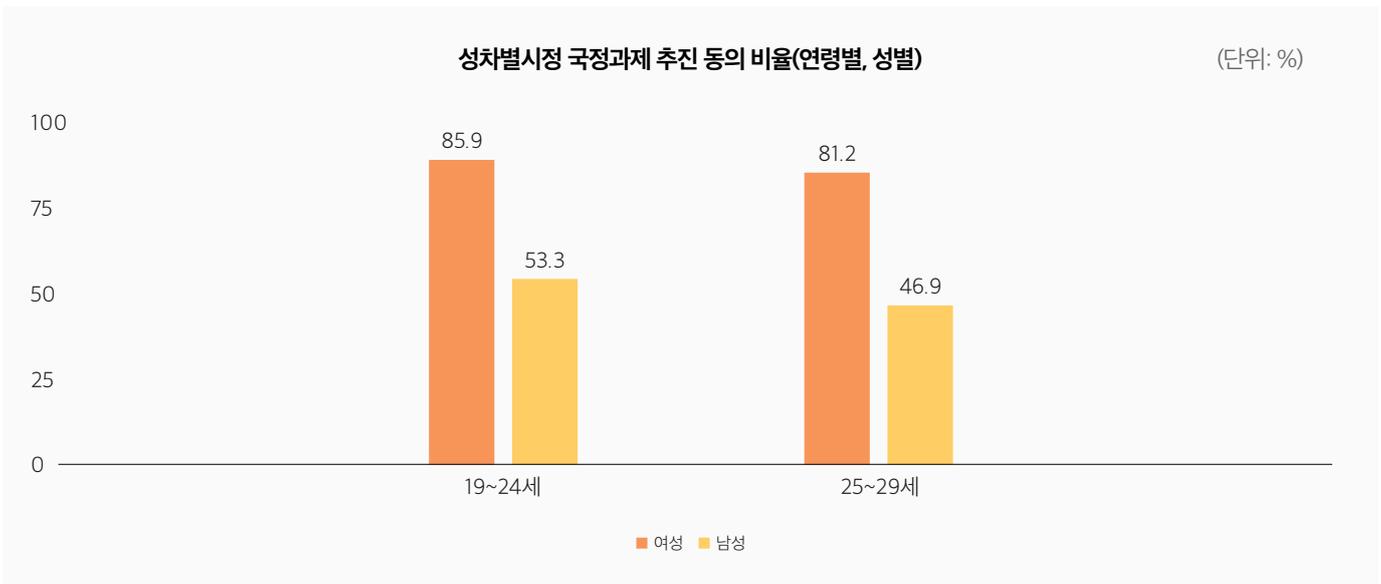
-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 여성은 80.8%, 남성은 47.2%가 성차별 시정 국정과제 추진에 동의한 한편 중상층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룹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동의율 격차는 87.7% 대 53.3%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 다만 하층에 속한다는 남성들에 비해 상층에 속한다는 남성 중에서 성차별 시정 국정과제 추진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소 더 높았음



- 서울 거주 청년들 중 여성의 동의율은 81.7%, 남성의 동의율은 58.2%인데, 지방도 거주 청년들 사이의 남녀 격차도 여성 88.4%, 남성 48%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청년이나 지방광역시 청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성 격차가 발견되었음. 한편 성차별 시정 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남성의 비중은 광역자치단체(시) 거주자가 가장 적었음(43.5%)



- 남녀 모두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차별 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에는 변함이 없었음. 보수적 성향의 청년 중 여성은 71%가 성차별 시정의 국정과제 추진에 동의하였으나 남성 중에서는 39.6%에 불과했음. 한편 진보성향 청년 중에서는 여성의 동의율은 89.1%, 남성의 동의율은 60.4%에 달했음



-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 연령대가 성차별 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낮지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컸음. 그러나 20대 초반 남성의 동의율은 53.3%로 20대 후반 남성들 4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교육수준이 높은 낮은, 20대 초반이든 후반이든,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서울 거주자든 지방 도지역 거주자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낮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차별 시정을 국정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록 남성의 동의 정도는 과반수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으로 여성에 비해 많이 낮지만, 그중에서도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남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층 이상인 남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남성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차별 시정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음. 이는 남성이 학력 등 다른 차원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클수록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을 보여줌

구체적 성차별 시정 정책들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별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해 청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정책들에 대해 필요하다는 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여주었음
 - 특히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촉진'(3.34),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용 촉진(3.54)',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3.4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3.37),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3.53), '여성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3.33) 등의 정책분야에 대해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대체로 근로자 대상 육아 지원이나 일·가족양립 지원의 필요성, 성폭력·성희롱 근절 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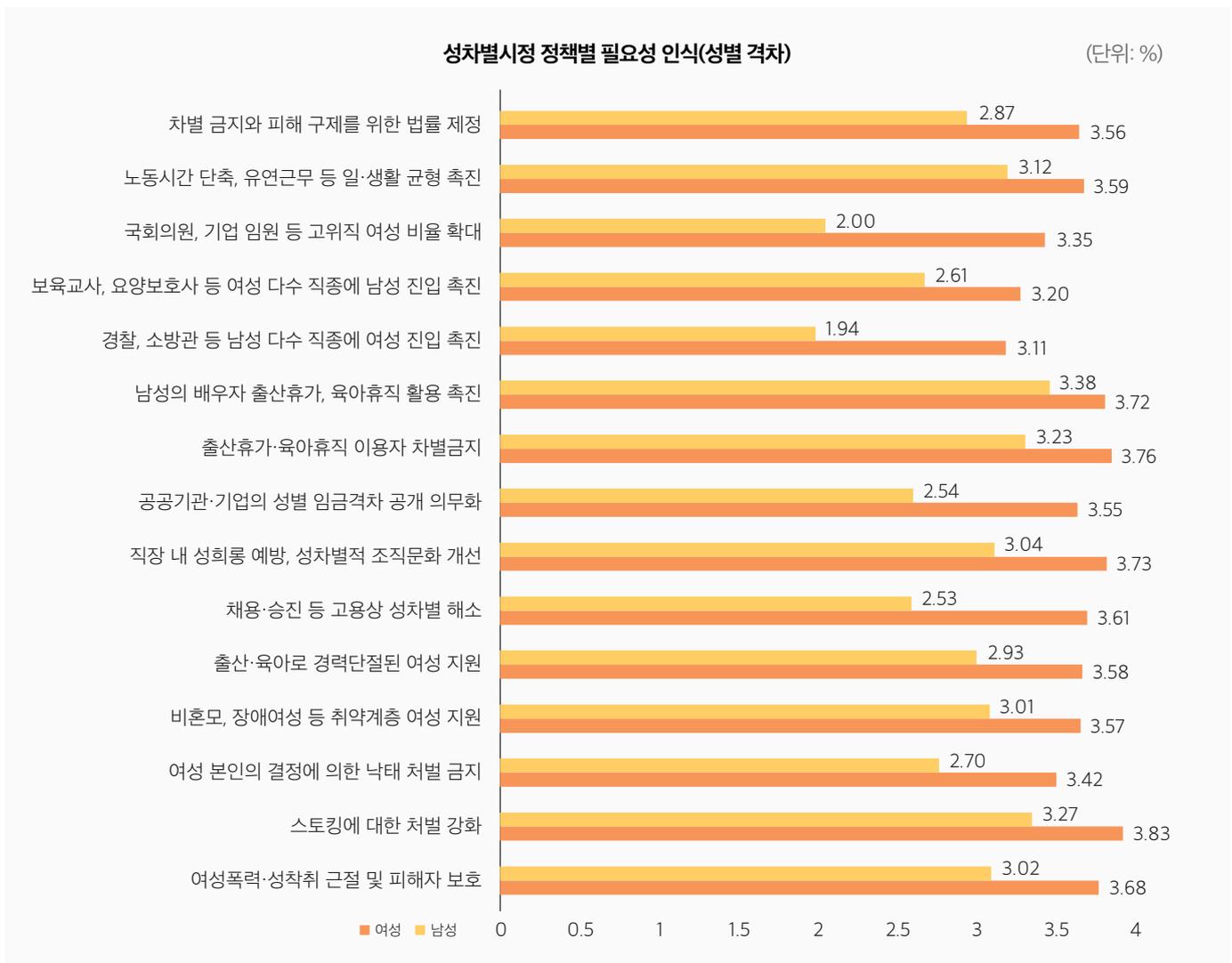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필요하다" 4점

• 제시된 모든 성차별 시정 정책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특히 ‘국회의원, 기업임원 등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나 ‘경찰, 소방관 등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2점 이하 점수를 보여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드러냈음(이 모든 성별 차이는 평균차 검정 결과 유의수준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여성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3.83)였으며, 다음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3.7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3.73),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촉진’(3.72) 순이었음

- 20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모든 성차별 시정 정책 영역에서 필요성을 더 적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촉진’(3.38),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3.27),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3.23)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했음

- 이 정책들은 20대 여성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들이기도 하다. 결국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가 가장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위 3개 정책 영역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촉진’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필요성 인식이 거의 일치하였음



주: 모든 정책 필요성 평균 점수의 남녀 간 차이는 평균차 검정(F-test) 결과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대 여성과 남성 간 필요성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정책 영역은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경찰, 소방관 등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 ‘공공기관·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채용·승진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 등 주로 공공·민간영역의 고용 및 승진상 성차별 시정과 관련한 정책들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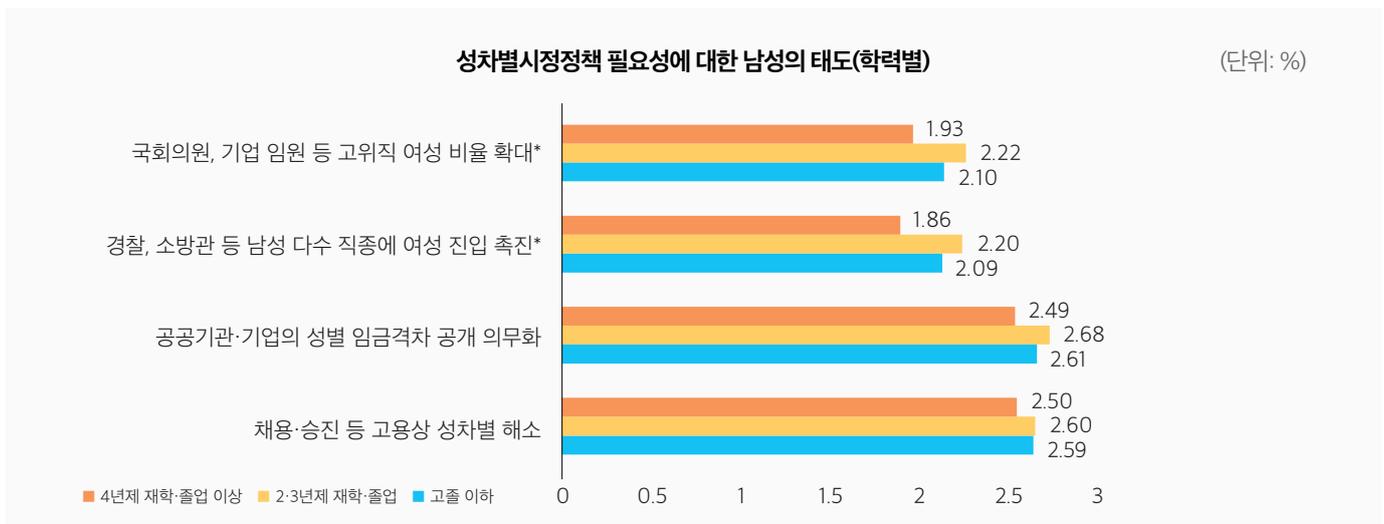
- 가장 성별 인식격차가 컸던 정책 영역은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로서 여성은 3.35로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치우친 응답을 보였으나 남성은 2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 다음으로 인식 격차가 큰 정책 영역은 ‘경찰, 소방관 등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으로서 여성은 3.11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남성은 1.94로 모든 정책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불필요하다는 편에 치우친 태도를 보였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다수 직종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남성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남 2.61 대 여 3.20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필요하다는 편으로 기울어진 태도를 보였음

- 이는 공공·민간영역의 이른바 관창은 일자리와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직 일자리를 두고 20대 남성이 여성을 잠재적 경쟁자 혹은 기존의 남성 지배적 위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힐 수도 있음

- 관창은 일자리와 고위직 진출 가능성을 둘러싼 20대 남녀의 경합과 갈등이 이런 일자리에서 여성의 과소대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 조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그토록 큰 성별 격차를 낳은 원인이라면, 이런 직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중상층 이상 계층에서 위와 같은 네 가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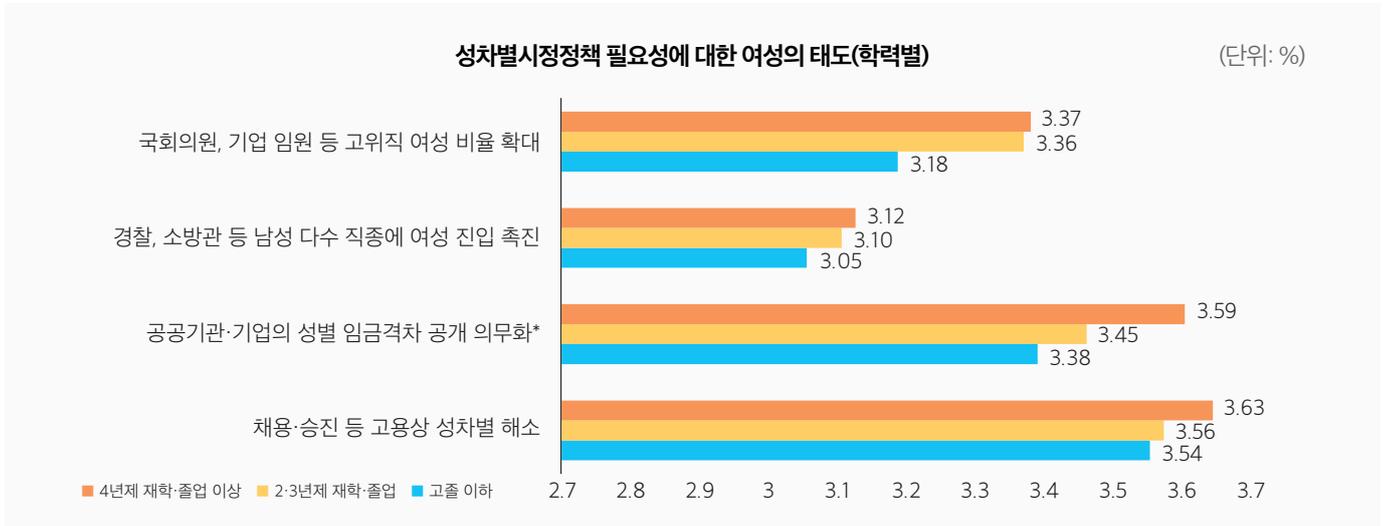
-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런 예측을 지지하지 않았음.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 모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해당 정책 필요성 인식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고,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음

-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 정책, ‘경찰, 소방관 등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고학력 남성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을 뿐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주: * 평균차 검정(F-test) 결과 5% 미만 유의수준에서 교육수준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 반면 20대 여성 집단에서는 ‘공공기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만 고학력 여성의 필요성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을 뿐 다른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수준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별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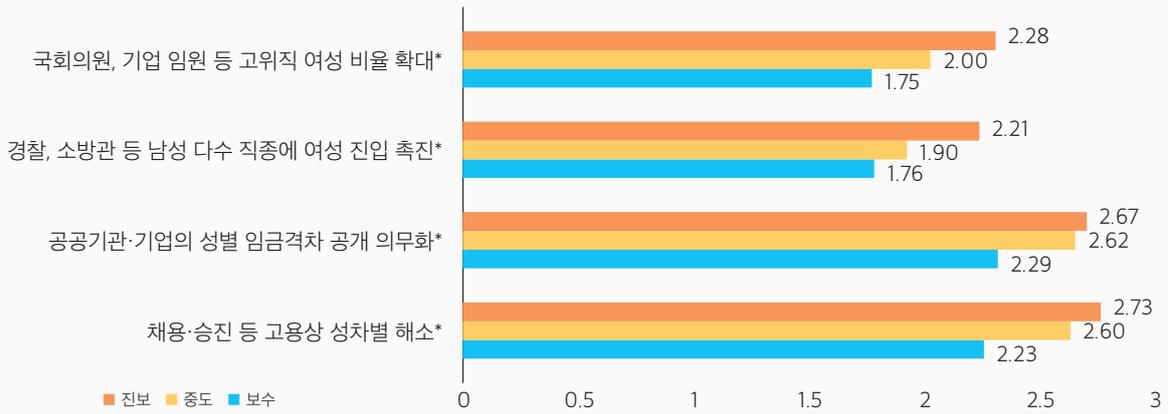


주: * 평균차 검정(F-test)결과 5%미만 유의수준에서 교육수준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 즉, 안정적 일자리 혹은 고위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20대 남성은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20대 여성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지만, 그 자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학력, 중상위 계층의 남녀들 사이에 필요성 인식이 특별히 더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음
-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이 높은 낮은 별 차이 없이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고위직 일자리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 역시 본인의 교육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해당 일자리에 여성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임
- 교육수준이 높고 중상위 계층 출신인 20대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것이 아님이 드러난 한편, ‘정치적 성향’이야말로 20대 남성 집단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의 필요성 인식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음
 - 정책 필요성 인식에서 성별로 격차가 컸던 네 가지 정책 영역 모두에서, 보수적인 20대 남성에 비해 진보적인 20대 남성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예컨대 ‘국회의원, 기업임원 등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 정책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규정한 남성은 불필요하다 쪽으로 치우친 응답을 보여준 반면(1.75), 중도라고 규정한 남성은 중립적 응답(2.00)을, 진보라고 규정한 남성은 필요하다 쪽으로 치우친 응답(2.28)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성차별시정정책 필요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정치성향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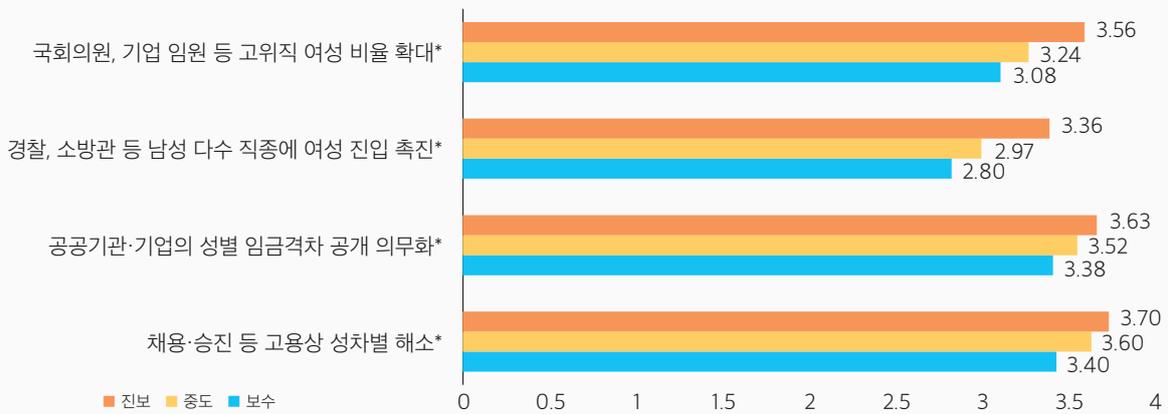


주: * 평균차 검정(F-test) 결과 5% 미만 유의수준에서 정치성향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 정치적 성향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20대 여성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었음

성차별시정정책 필요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정치성향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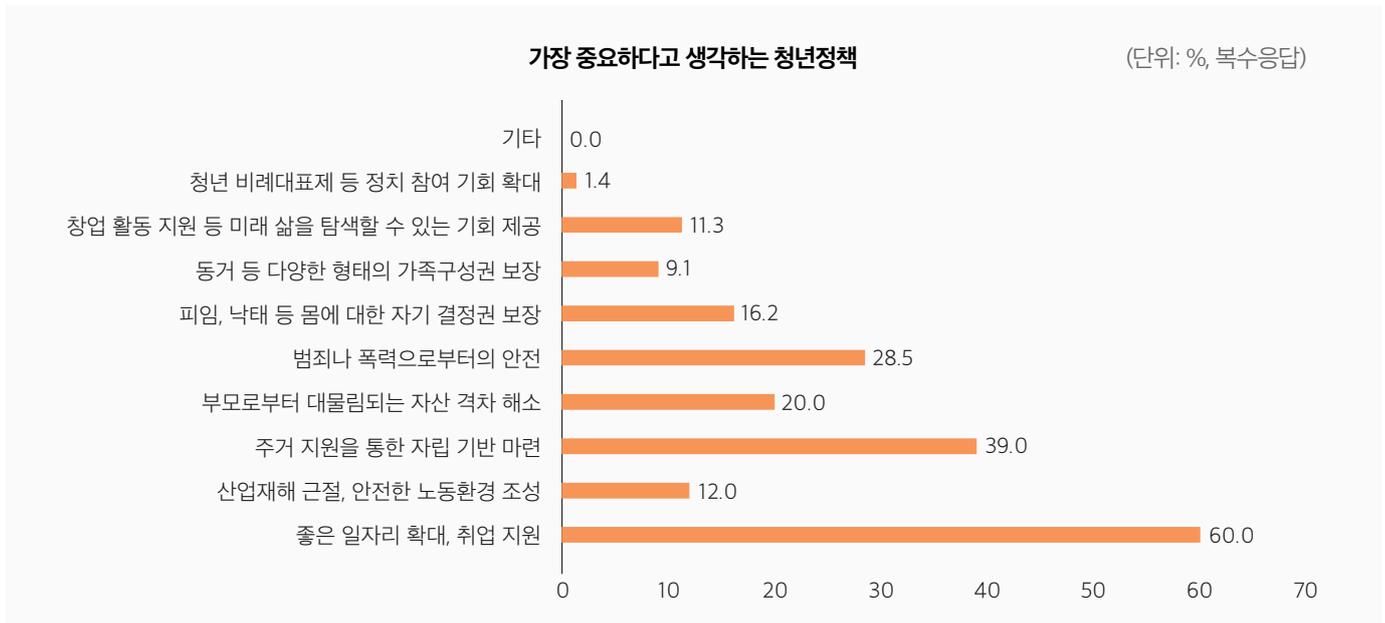


주: * 평균차 검정(F-test) 결과 5% 미만 유의수준에서 정치성향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청년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

- 가장 많은 20대 청년들이 중요한 청년정책으로 꼽은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정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자산격차 해소’, ‘범죄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순이었음

- 청년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2개 고르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0.0%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정책을 골랐으며, ‘주거지원 통합 자립기반 마련’정책은 39.0%,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자산격차 해소’ 정책은 20.0%, ‘범죄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정책은 28.5%가 각각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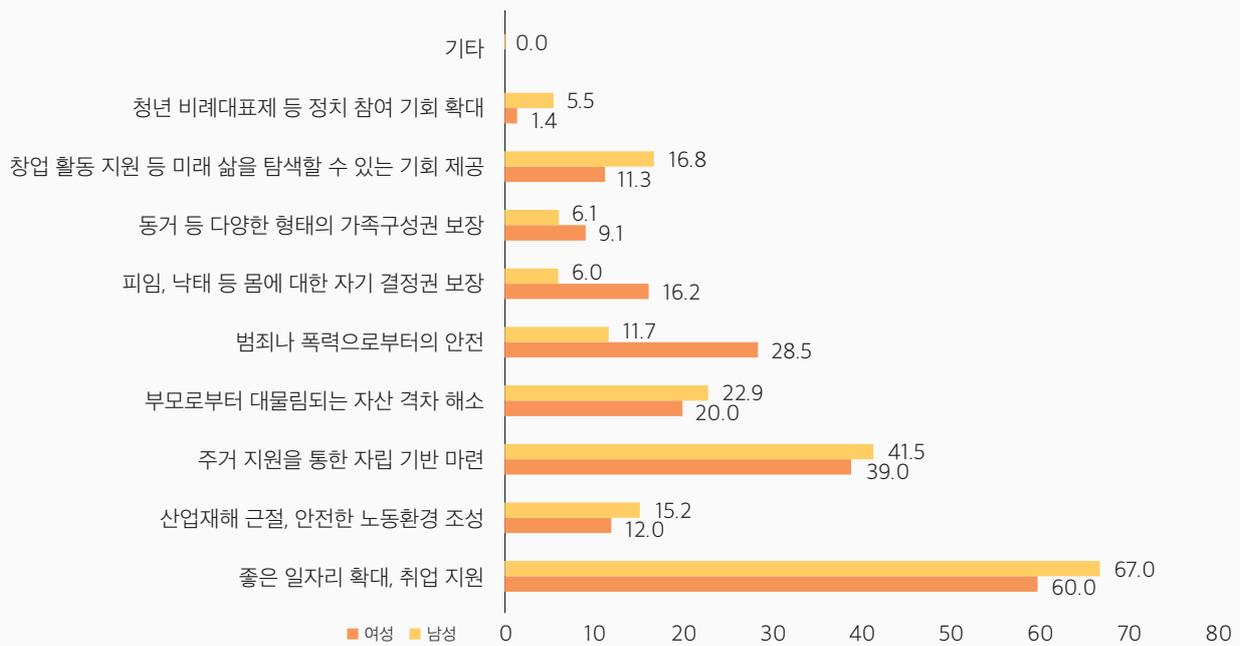


- 성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이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정책과 주거지원 정책이었다는 점에서는 남녀가 차이가 없으나, 남성의 경우 세 번째로 선택을 많이 받은 정책은 부모 재력에 의한 자산격차 해소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꼽혔음

- 남성 응답자 중에 부모 재력에 의한 자산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2.9%이고 여성 중에서는 20%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중에서는 28.5%를 차지해 부모의 재력에 의한 자산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앞지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11.7%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 성별 차이

(단위: %, 복수응답)



청년세대와 성평등정책 추진방향

- 성차별 시정 혹은 성평등 증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20대 청년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남성 중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저학력, 지방 광역시 거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의 반대 비율이 특별히 더 높은 데 기인함. 교육수준, 거주지역, 소득계층 등에 입각한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남성일수록 '차별받는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비중있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더 크다는 사실은, 성에 입각한 차별도 지역이나 학력이나 소득계층에 입각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차별의 한 차원이며 따라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형태의 차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청년들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출신지역, 고용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고려하는 종합적 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구체적 성차별 시정 정책 중에서 조사대상 청년들은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촉진',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촉진',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정책분야에 대해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구체적 성차별 시정 정책들 대부분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한편, 그 중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촉진’ 등 성폭력 대응과 일가족양립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필요성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남녀 간 이견이 가장 좁혀진 정책분야로 간주될 수 있음
- 반면,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경찰, 소방관 등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 ‘공공기관·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채용·승진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 등 주로 공공·민간영역의 고용 및 승진상 성차별 시정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남녀 간 필요성 인식의 격차가 가장 컸음
- 그러나 해당 직위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고학력 중상층 계층 남성의 반감이 해당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한 남성 일반의 부정적 태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오히려 남녀를 막론하고 해당 적극적 조치 정책들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임이 드러났음
- 그러므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 차별 금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촉진’ 등 추진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남녀 모두 동의하는 성폭력 대응과 일·가족양립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남성 집단 중에서 특히 추진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경찰, 소방관 등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 ‘공공기관·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채용·승진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 등 관찮은 일자리 및 고위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들에 대해서는, 남성의 부정적 태도의 원인을 밝혀서 대응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함
- 본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해당 일자리에 여성과 경쟁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고학력 중상층 남성들의 반감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학습과 그에 따라 형성된 정치적 정체성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그러므로 해당 적극적 조치성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의 취지나 목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을 막고, 현재 이 영역에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원인이 체계적 차별에 의한 것이며, 적극적 조치가 이 차별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증거기반적 정책홍보가 필요함. 관찮은 일자리나 고위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연구와 대국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임
- 마지막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은 역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정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원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주거를 통한 실질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며, 그 꿈의 실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음. 또한 청년 여성들은 이 두 가지 못지 않게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